

## 한미 FTA 체결과 남북경협

김 영 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한미 양국이 FTA 협정문 발효 이후 ‘한반도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개성공단 자체를 인정함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인식한 셈이 된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나,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으로써 이들 제품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시범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협력에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지난 1월 말까지 개성공단 몇몇 시범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한 규모만 하더라도 1억 달러가 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직은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판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자체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미국 시장에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없이 또는 저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개성공단이 중심이 될 남북경협은 날개를 단 셈이 된다. 현재 대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규모와 경협 수준은 질적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북한에게 있어 인건비 증대는 물론, 기술습득과 기업운영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 만만찮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전환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 북한 지역에서 남북 공동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한국산 원산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위원들을 개성공단으로 초청해 생산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에 지불하는 인건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실제 방문했을 때와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인식 자체부터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 북한 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보아야 북한이 달라질 수 있음도 느낄 수 있다.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아니다. FTA 협상 타결과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특혜대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판적 입장의 인사들도 초청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건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는 물론, 완전한 핵 폐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협정문의 발효,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운영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 문제 해결,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북한 체제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개성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제품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가 개성공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폐기 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한미 FTA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을 포함, 남북 관계는 일대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남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역할과 체제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은 적어도 남북한이 공히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밑받침이 되기에 충분하다.